

◎ 江原大, 교육·연구·행정 분야에 전반적 개혁방안 마련

강원대가 국내대학 가운데 최초로 지난 10월 4일 교육·연구·행정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대학 개혁방안을 마련,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대에 따르면, 교육연구 부문의 경우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과 교수의 연구풍토 개선을 위해 오는 94년부터 교수들의 강의평가제와 연구실적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수강의평가제는 교수개인이 자율적으로 평가항목을 선정, 학생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고, 교수의 연구실적평가는 기존 연구실적의 경우 이미 전산화작업이 끝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앞으로 매년 연구실적을 평가, 행정·재정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종합평가제 실시에 대비, 오는 95년부터 학과 및 단과대학의 자체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원인사관리 개선을 위해 교수채용에 따른 전형과정 및 내용을 공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교수 이상의 승진요건을 현행 논문발표 실적연간 2백% 이상에서 3백% 이상으로 강화, 오는 9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에 설치된 각종 연구소에 대한 평가제도를 94년 3월부터 도입해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지원을 차등화하고 유명무실한 연구소는 과감히 통폐합키로 했으며, 연구비도 기존의 개별지급을 지양하고 중앙관리제도를 시행, 연구지원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행정부문의 경우 교수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대학 행정인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경영행정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등 3개 전문대학원과 부속기관 및 대학연구소들 각각 관련 대학장과 학과장이 겸직토록 하고 단과대학의 교무·학생·사무과를 통합,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여분의 인력과 예산을 교육연구 부문

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대학본부와 행정실 및 부속기관의 행정인력을 현재의 4백 43명에서 10% 수준을 감축, 인력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하고 보직교수에 대한 기성회수당을 폐지, 절약되는 예산을 교육·연구와 시설확대에 투자한다.

강원대 측은 이같은 대학개혁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현재 교육부에 있는 대학 직제 개편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 慶南大, 통일문제세미나 개최

경남대는 지난 9월 16일 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본관 대회의실에서 '문민정부하에서의 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로 통일문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주제는 '남북경제협력의 함의와 과제'(조영진, 경제학과), '북한 언론의 참모습'(김영주, 신방학과), '민족통일을 위한 발상 전환의 모색'(이종석, 정치학) 등이다. 발표자들은 남북한 경제의 양적·질적 상이성을 전제로 한, 남북한 공통분모인 국민생활향상과 국제·국내적 경제이해를 같이할 때 남북통일은 낙관적이라는 점과, 북한 신문이 문화적 정치적 교양의 강력한 수단과 사상적 무기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 통일방안에서 새로운 사고요구와 세계정치를 염두에 둔 통일공동체의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다.

◎ 高麗大, 국립환경연구 협정, 研究費 운영 규정 마련

고려대는 지난 9월 21일 국립환경연구원과 硏 협정체결식을 가졌다. 환경과학기술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이번 체결식은 金

熙執 총장, 吳澤燮 연구교류처장, 徐胤洙 국립 환경연구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결식에서 동교와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사업의 상호협력과 學·研 협동연구 석·박사 과정 설치를 위한 약정서를 교환했다.

한편, 동교 연구교류처에서는 '연구비중앙집중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부설연구소 및 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이 규정은 연구활동의 활성화와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 및 사용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비관리는 연구교류처에서 중앙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의 지명으로 관리능력을 갖춘 부설연구소로 위임될 수 있다.

관리부설연구소 지정 및 해제는 2년마다 연구관리운영현황을 학술연구위원회(위원장=吳澤燮 연구교류처장)에서 심의한 후 총장이 결정한다.

교원의 연구비 신청은 연구과제와 관련된 관리기관을 경유해야 하며, 연구과제의 특성상 관리부설연구소가 없는 경우 연구교류처에서 직접 연구비를 관리한다.

이 규정은 관리부설연구소 선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檀國大, 동양학 학술회의 개최

단국대는 지난 10월 22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3회 동양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조선왕조 후기(9)—조선후기의 사상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성리학의 정치사상, 사회관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발현되는 여러 부문들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는 발표와 토론을 같은날 진행하며, 종래의 종합토론방식 대신 약정토론방식을 채택했다.

이날 발표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조선후기 정치사상과 낭론=발표자: 이은순(한국의국어대), 토론자: 이성무(정신문화연구원), 정만조(국민대) ▲ 조선후기 성리학의 사회관=유초하(충북대), 김준석(연세대), 문철영(단국대) ▲ 조선후기 예송논쟁의 성격과 의미=지두환(부산대),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고영진(서울대) ▲ 조선후기 개성지식인과 북학사상=유봉학(한신대), 박충석(이화여대), 조성을(아주대) ▲ 조선후기 양명학에 있어서의 근대정신=김길락(충남대), 송재운(동국대), 양태호(공주교대) ▲ 조선후기의 도교사상=차주환(단국대 대학원), 이종은(한양대), 송함룡(성균관대)

◎ 東亞大, 연구전산망 개통, 석당研 북경대 교수 강연 개최

동아대 전자계산소(소장 변건식)는 정보제공과 연구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자 단과대 교무과, 주요행정부서, 컴퓨터·전자공학과 사무실에 연구전산망을 설치했다. 4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된 연구전산망은 전자우편·전송·원격접속 등의 10여 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변건식 전자계산소장은 "연구전산망은 종전의 학점평가·행정실무 위주에서 교수·대학원생들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퍼스널컴퓨터로도 정보활용이 가능하다. 내년에도 모든 과사무실에까지 랜(LAN)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당전통문화연구원(원장: 강동균, 철학파)은 지난 10월 16일 何芳川 북경대학 중학과 교수를 초청 '태평양 시대와 중국의 장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관 동시통역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태평양시대를 맞아 태평양연

안국가와 중국의 위치에 대한 초청강연에 이어 등소평 사후의 문제 및 중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 延世大, 특허법무대학원 신설인가 받아

연세대는 지난 9월 3일 교육부로부터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학문적 연구를 위한 '특허법무대학원' 신설을 인가받았다.

특허법무대학원은 특허 및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학과 등 4개 전공학과로 구성되며, 지적 재산권 분야와 응용과학, 경영공학, 전자정보 등의 교과과정을 개설한다.

한편, 특허법무대학원측은 오는 11월 27일 기존의 특수대학원과 같은 선발 과정을 통해 오는 94년 1학기 첫 신입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嶺南大, 교비 자유공모 연구비제도, 유급 연구조교제 실시

영남대 연구처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자체의 예산으로 처음 실시되는 '교비 자유공모 연구비 제도'의 93년도 수혜자를 확정·발표했다.

연구처는 자유공모 연구비로 1억 원을 책정하고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63건을 신청받아 예비심사, 전공심사를 거쳐 9월 23일 최종심사에서 21건을 확정했다. 수혜자로 선정된 21명의 교수는 각각 4백~5백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올해 10월 1일부터 94년 9월 30일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교수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심사는 전원 외부심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처는 연구계획서 1편당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도록 했으며, 심사위원의 세부전공까지 파악해 심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

해 외부에 맡겼다.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시간도 다소 걸렸다. 그러나 심사위원이 소견까지 적어보내는 등 심사를 매우 성실히 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된 자유공모제는 순번제로 지급하는 연구비와는 달리 교수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를 검토, 심사해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해 연구풍토 개선에 대한 기대를 모아왔다.

이수진 연구처장(국사학과)은 "교내연구비 지급이 안배식, 나눠먹기식이었고 연구비 관리, 연구결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94년도에는 종전의 순번제 연구비 제도를 폐지하고 95년부터 자유공모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영남대는 유급연구조교제를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급연구조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자 중에서 지도교수가 선정하는데, 지도교수의 실험실 또는 연구실에 상주하여 교수의 연구를 보조하며 1년에 논문 한 편씩을 제출해야 한다. 단, 대학에 강의를 나갈 경우 출강시간은 배려된다.

현재 유급연구조교에 대한 혜택은 등록금 전액면제와 등록금 반액면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등록금 반액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연구처장(국사학과)은 "유급연구조교제 시행으로 1년에 약 2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액면제로 50명 정도 두는 것보다 반액면제로 1백 명 정도를 두는 것이 교수, 학생에게 모두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영남대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무급조교제도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해당교수가 유급연구조교를 2년 내지 3년 이상 들 수 없도록 해 교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이다.

◎ 仁荷大에서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10월 28일~30일에 걸쳐 한국교육학회 40주년 기념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인하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렸다. 첫날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에는 초청강연으로 김태길 철학문화연구소 이사장의 '한국의 미래상과 인간교육의 문제', 기초강연으로 이돈희 [서울대 교수]의 '21세기의 사회와 한국의 교육'이 있었다. 제 2일에는 영역별 주제발표 및 토론, 제 3일에는 11개 분과 연구회별 개인발표가 있었다. 영역별 발표주제와 발표자 및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 제 I 영역 : 교육의 인간상,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사회 및 종합보고 : 김병성(한국교원대)

—제 1 주제 : 전통적 인간상

발표 : 신용국(창원대)

토론 : 박선영(동국대),

강승규(전주우석대)

—제 2 주제 : 현대 청소년의 정체와 인간상

발표 : 이재창(홍익대)

토론 : 박성수(서울대),

한승희(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제 3 주제 :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

발표 : 이순형(제주대)

토론 : 이충원(충북대), 오인탁(연세대)

▲ 제 II 영역 : 교육체제, 이대로 좋은가?

사회 및 종합보고 : 노종희(한양대)

—제 1 주제 : 학교교육의 실상과 교육개혁의 방향

발표 : 이종각(강원대)

토론 : 전성연(고려대), 박종렬(경북대)

—제 2 주제 : 교원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발표 : 진동섭(서울대)

토론 : 신철순(전북대),

유한구(서울교대)

—제 3 주제 : 행정운영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발표 : 신재철(전남대)

토론 : 신중식(국민대), 이일용(중앙대)

▲ 제 III 영역 : 미래교육,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회 및 종합보고 : 강무섭(한국교육개발원)

제 1 주제 : 정보화시대를 위한 교육

발표 : 유완영(한양대)

토론 : 변영계(부산대),

정택희(한국교육개발원)

—제 2 주제 :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발표 : 정영수(인하대)

토론 : 이영수(경기대),

오만석(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 3 주제 : 고도산업사회와 환경교육의 과제

발표 : 최동형(한국교육개발원)

토론 : 한경수(단국대), 김성열(서원대)

▲ 제 IV 영역 : 교육,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회 및 종합보고 : 김재복(인천교대)

—제 1 주제 : 유아가정교육의 실상과 방향

발표 : 이기숙(이화여대)

토론 : 이영석(성균관대),

강문희(서울여대)

—제 2 주제 : 청소년교육의 실상과 방향

발표 : 박아청(계명대)

토론 : 김광웅(숙명여대),

김충기(건국대)

—제 3 주제 : 성인교육의 실상과 방향

발표 : 최운실(한국교육개발원)

토론 : 이현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선희(충남대)

◎ 教育部, 교수재임용평가기준 개선

내년 3월부터 교수기간제 임용제도(재임용制)가 교수로서의 교육 및 연구능력, 교내외 봉사활동을 중점평가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력과는 무관하게 재임용제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교수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며 교수들의 강의 및 연구 노력도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9일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 본연의 임무와는 동떨어진 채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등을 평가토록 했던 기존 교수기간제 임용평정항목 중 주관적인 평가영역을 삭제했다.

제외된 주요 항목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 인간관계 △ 건강상태 △ 학생지도에 대한 자세 △ 국가사회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 △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 근무자세 △ 인화관계 △ 준법정신 등으로 그간 해직 교수들은 이 독소조항들이 재단측으로부터 비판적인 교수들을 쫓아내는 데 악용됐다고 비난해 왔다.

교육부는 평정자의 자의적인 점수부여가 가능한 이들 조항을 평가항목에서 없애는 대신 대학의 대외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평가항목을 △ 교육 △ 연구 및 창작활동 △ 교내외 봉사활동 △ 기타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내년 3월부터 평가토록 했다.